월/요/광/장

최병진

누구를 위한 신문고시 개정인가

지난 9월30일 한국ABC협회(Audit Bureau of Circulations : 신문·잡지·웹사이트 등 매체량 공사기구) 이사회는 신문부수공사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유료부수는 구독료 정가를 원칙으로 하되, 할인 부수의 경우는 구독료 정가의 50% 이상을 수금할 경우 유료부수로 인정한다는 게다. 쉽게 말해 구독료 50%만 받아도 유료부수로 셈한다는 뜻이다. 독자 입장에서 보면 신문 한 부 가격만 내고 두 부를 구독할 수 있다. 이른바 반값 신문 시대가 열렸다. 그렇지 않아도 물가가 하늘을 모르고 오르는데 좋은 소식일 수도 있다.

그러면 왜 이것을 문제 삼을까? 우리는 겉으로 보면 문제가 없고 어쩌면 좋다고 생각한 일이 곰곰이 생각해 보면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다. 겉 다르고 속 다르다는 게 이런 경우다.

신문고시라는 게 있다. 신문사들이 독자를 늘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경품을 제공하거나 무가지를 끼워 넣는 등 과당 경쟁이 기승을 부리던 1996년 경기도 고양시에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지국 사이에 신문투입을 둘러싼 다툼이 살인으로 이어졌다. 이에 정부는 신문업계의 과당 경쟁과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하여 신문고시를 시행했다. 신문고시는 그 후 폐지되었다가 다시 부활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지금 시행되고 있다. 내용은 무가지와 경품 제공을 유료대금의 20%로 하며, 신문구독 사절 후 7일 이상 강제 투입하지 말 것 등이다.

한국ABC협회의 세칙 개정은 신문고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신문고시에 따르면 구독료 정가의 80% 이상을 수금할 경우만 유료부수로 인정한다. 신문고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무가지 및 무상의 경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신문법 10조 2항의 시행령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한국ABC협회는 현행법을 어겼다.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한국ABC협회의 세칙 개정 소식을 듣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서 신문고시를 바꾸겠다고 밝혔다. 민간자율기구의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취지란다.

왜 그럴까? 그동안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는 신문고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표명해 왔다. 그 논지는 신문사 경영활동에 정부가 광범위하게 간여하는 것은 언론 탄압이라는 것이다. 이에 화답하듯 현 정부 출범 이후 신문고시 폐지 논의가 정부차원에서 터져 나왔다. 작년 4월 당시 백용호 공정거래위원장(현 국세청장)은 업무보고에서 소관 법령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면서 신문고시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한나라당이 강행처리한 미디어법 중 신문법 개정안 원안에는 신문고시의 모법에 해당하는 10조 폐지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지난 6월 23일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시 신문고시 철폐를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중소신문과 지방일간지 시민단체들은 고시 폐지는 조·중·동 불법경품에 날개를 달아주겠다는 뜻이자 마음 놓고 신문시장을 유린하고 독식하라고 부추기는 꼴이라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결국 공정위는 8월 23일 신문고시를 3년 연장하여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ABC협회가 세칙을 개정했고, 문광부는 신문고시를 고쳐 ABC협회의 위법을 정당화시켜 준다는 것이다. 결국 조·중·동이 원해서 현 정부가 들어주려 했으나 중소신문과 지방일간지 시민단체들의 반대 때문에 못했던 것을 민간자율기구가 먼저 고쳤으니 정부가 뒤 따라간다는 것이다.

지금까지가 겉으로 드러난 사태를 살핀 것이라면 속으로 들어가 경제적으로 생각해 보자. 한 달 구독료만 오천 원으로 두부를 주는 세트 메뉴인 조선일보·스포츠조선, 중앙일보·일간스포츠, 동아일보·스포츠동아를 택하겠는가, 아니면 한 부만 배달해 주는 한겨레신문, 경향신문 혹은 지방 신문을 구독하겠는가? 눈 감고도 알 일이다. 한국ABC협회의 결정을 가장 반기는 게 조·중·동이다. 그러면 왜 신문 값이 반 토막나는데 조·중·동은 좋아할까?

신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신문사 수입 중 구독료가 차지하는 비율은 30% 미만이다. 70% 이상을 광고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 신문시장의 광고요금은 천차만별이다. 우리나라 신문광고 요금은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어 있다. 한국의 기형적인 신문광고요금(외국의 일급지와 비교할 경우 미국보다 4.1배, 일본보다 2.4배)은 신문 판매의 정상화에 매우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구독료를 땡 처리한다 해도 유가 부수를 두 배 인정받을 경우 광고시장에서 더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다.

더욱 현재 신문시장은 조·중·동이 전체의 50% 가까이 점유하고 있다. 거기에 반값 세일을 한다면 점유율은 얼마나 더 올라갈까? 중소 신문들과 지방일간지들은 직격탄을 맞아 존폐의 기로에 설 수도 있다. 언론자유의 필수 요건인 다양성도 물 건너간다. 세트 메뉴를 즐기는 동안 언론자유가 본질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말이다.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법조 칼럼

김우석

피해자 보호하는 형사법 만들자

검사로서 형사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우리 형사법 제도가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1억원을 사기당한 할머니의 사례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형사법제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사기꾼 A씨는 선량한 할머니에게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고 1억원을 받은 후 잠적하였습니다. B씨, C씨는 A씨와 할머니간의 돈거래에 관한 모든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A씨를 사기죄로 고소하면서 경찰에 B씨, C씨를 조사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경찰은 B씨를 조사하였으나, B씨는 A씨와의 친분 때문에 A씨에게 유리하게 거짓말하였습니다. 경찰은 C씨를 조사하려고 하였는데, C씨는 출석을 거부하였습니다. 현행법상 C씨의 출석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A씨에 대한 수사는 증거부족으로 진척되지 못한 채 계속 지연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피해변제를 받지 못한 채 사건이 지연되면서 이자부담 등의 고통이 가중되었습니다. 결국 기다리다 지친 할머니는 A씨로부터 2천만원만 받고 합의하였습니다.

필자는 할머니를 위해서 A씨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C씨가 수사기관에 출석해서 조사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으로는 이것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반면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이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형사법이 무언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고민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A씨, C씨처럼 수사기관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조사를 받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A씨, C씨와 같은 사람들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그릇된 인권관과 이기주의가 확산되면서, 수사기관에서 거짓말해도 괜찮고, 타인을 위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기 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A씨와 C씨와 같은 사람들이 할머니를 위하여 거짓말을 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진실을 말하도록 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근대 형사법은 국가의 부당한 형벌권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탄생하였기 때문에 피의자 보호에 치중해 있는데, 현재 우리 형사법도 그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인이 개인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가의 부당한 형벌권 행사는 줄어든 반면에, 개인이 개인을 상대로 저지르는 범죄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합니다.

필자는 검사가 아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 뿐인 피해자 보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가 실현되는 형사법 제도가 만들어 지기를 기대합니다.

그 첫걸음은 피해자를 위해 진실을 말하는 제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수사기관에서 거짓진술을 하는 사람을 처벌하고(현재 법원에서 거짓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됩니다), 진실을 밝히는데 중요한 사항을 알고 있는 사람은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출석하여 진실을 말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지검 검사〉

기고

강소원

시간의 가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가버린 시간은 돌이킬 수 없고 오늘은 다시 오지 않는다.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면 시간을 의미 없이 낭비하는 경우가 많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물론 우리 사회에는 모자라는 시간으로 인하여 쩔쩔 매면서 성실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더 많다. 그러나 시간이 너무 많아 또는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허송세월하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것 역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것은 개인 뿐만 아니라 국가나 민족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다. 일본과 중국을 보자.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에 패한 후 전열을 재정비하고서 흐트러진 국민의식을 한데 모아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함으로써 90년대에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강대국에 섰다. 중국도 마찬가지다. 개방·개혁정책을 줄기차게 실시함으로써 이제는 아시아권은 물론이요, 세계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것은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으로 활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일본과 중국이 그들 나름의 목표와 꿈을 갖고서 미래를 향하여 발돋움하고 있는 것에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어떤가? 그동안 많은 분야에서 크게 성장해 왔지만 아직도 국민 의식이 많이 바뀌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우리 모두 피와 땀과 눈물의 손실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시간의 낭비를 하고 있지 않은지 뒤돌아보면서 근면 협동 저축의 상징인 개미처럼 부지런히 살 수는 없을까?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자가 된 피겨의 여왕 김연아, 골프여제 신지애, 지구상 가장 빠른 사나이 볼트,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 등을 보라. 그들의 노력과 피와 땀과 눈물로 얻어낸 값진 영광은 그 얼마나 장한 것인가!

큰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에 올라갈 무렵의 일이다. 네 아이들이 학교 갔다 집에 돌아오면 책가방 던져 놓고 텔레비전을 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하루는 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텔레비전 없애는 문제를 의논했다. 큰아들은 동의했지만 나머지 아이들은 묵묵부답 이었다. 큰 맘 먹고 텔레비전을 없앴더니 아이들이 며칠 동안 이웃 친구 집에 가서 텔레비전을 본 모양이다. 그러다 며칠 후에는 텔레비전 보는 것을 포기한 것 같았고 차츰 책으로 눈을 돌리더니 성적은 올라갔고 네 아이들 모두가 좋은 성적으로 대학교를 졸업했다. 나는 텔레비전의 부재로 인한 교육효과를 크게 본 사람이다.

지금 우리는 각자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부지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 그 까닭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일해서 내가 잘 살고 내 나라가 발전함으로 인해 모두의 삶의 질이 좋아지기를 기대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마음에 두고서 귀한 시간을 잘 활용하여 참된 성공을 향한 여정에 좋은 결과 얻기를 간절히 바란다.

〈전 송정도서관장〉

공공장소에서 혐오감 주는 '침뱉기' 자제를

길을 나서게 되면 어디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행위가 '침 뱉기'가 아닌가 싶다. 일전에는 앞차의 운전자가 운행 중 창문을 열고 '퉤'하고 침을 뱉어 뒤따르던 내 차 유리창에 그대로 엉겨 붙어 놀란 적이 있었다. 최근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왔다가 떠난 외국인 친구에게 그동안 한국생활에서 제일 힘들었던 것이 무엇이냐고 물었던 적이 있었다. 그는 거침없이 사람들의 침 뱉기가 견디기 힘들었다고 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침 뱉기를 하는 줄 몰랐다는 것이다. 도로의 청결도 문제지만 더욱이 국민의 이미지가 너무 불결하게 보인다는 부연설명도 덧붙였다.

침을 뱉을 경우 종이에 싸 휴지통에 버리고 가급적이면 거리에서 침을 뱉지 말자. 침 속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바이러스나 균들이 존재한다. 또 이를 보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혐오감을 조장하는 행위이다.

▲유용학·광주시 서구 덕흥동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사설

'경기회복 멀었다'는 추석 민심 정책 반영을

광주·전남 정치인들이 전하는 추석 민심은 여전히 경제다. 그만큼 서민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얘기다. 경기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커지고 있다고 하나 재래시장 등 민생현장은 여전히 썰렁했다는 것이 지역 정치인들의 전언이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 먹고 사는 문제가 주를 이루면서 현 정부의 실용정책에 대해서는 기대와 냉소가 엇갈렸다.

위기의 농촌을 살리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난 농심도 곳곳에서 확인됐다. 특히 올해는 쌀 등 농작물이 풍작을 이룬데다 소비 부진이 겹쳐 그 어느 때 보다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료 값이 인하되지 않는 데 대한 농가들의 불만과 세종시 건설 논란으로 인한 광주·전남 혁신도시 조성 차질을 우려하는 지역민심 또한 새겨 들어야 한다.

지역 정치인들이 추석 민심을 제대로 수렴했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경제활성화 대책을 펴도록 지역 정치인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지역 주요 현안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 정파를 떠나 한목소리를 내는 것도 중요하다.

지역민들은 정치권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상향식 공천을 지양하고 참신하면서도 개혁 성향의 인물을 공천해야 한다는 지역 여론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광주·전남이 텃밭인 민주당이 야당으로서 분명한 원칙을 지켜달라는 주문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명절이 아니더라도 정치인들은 국민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직접 살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서민들은 여전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으나 정치권이 정쟁에만 매달리는 모습도 볼썽사납다.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정치인들의 책무다. 추석 민심을 파악한 만큼 피부에 와 닿는 민생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강강술래 세계무형유산 등재 의미 살려야

전남 서남부 지역의 전통 민속놀이인 강강술래가 세계무형유산에 등재됐다. 유네스코가 지난달 30일 선정한 새로운 세계무형유산 76건 가운데 강강술래를 비롯한 남사당놀이, 영산재, 처용무 등 우리나라 전통무형문화재 5건이 포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의 세계무형유산은 기존의 종묘제례 및 종묘제례악, 판소리, 강릉단오제를 포함 모두 8건에 이른다. 겨레의 큰 명절 한가위를 환하게 빛낸 낭보가 아닐 수 없다.

세계무형유산 등재는 각국의 고유한 구전·무형유산 중에서도 인류가 우선적으로 함께 기억, 보존할 가치가 있는 우수한 유산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강강술래의 등재는 그런 점에서 자부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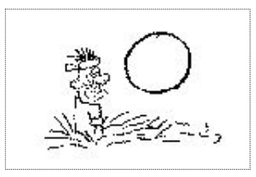
강강술래의 세계무형유산 등재의 의미는 남다르다. 강릉단오제는 지난 2005년 세계무형유산이 됐음에도 단오보다 훨씬 큰 명절인 추석의 대표적인 민속놀이인 강강술래가 빠져 그동안 아쉬움이 컸기 때문이다.

강강술래는 비단 특정지역의 민속놀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와 인종을 초월해 모두를 하나로 묶는 세계인의 놀이가 될 수 있음을 기회 있을 때마다 확인해왔다. 지난달 20일 서울과 도쿄에서 동시에 열린 '한일축제한마당 2009'과 지난달 21일 여수에서 열린 장애인 체육대회가 그 한 예다. 한·일 두 나라 국민과 장애인·비장애인이 서로 손에 손을 잡고 강강술래를 연출하는 모습은 뭉클한 감동을 자아냈다. 강강술래가 창의적이고 현대적인 계승작업에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세계적인 민속놀이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이다.

소리없이 사라져가는 세계 각국의 다양하고 고유한 문화적 전통을 더 늦기 전에 온 인류의 관심사로 떠올려 보호하고 후대에 넘겨주자는 게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의 취지다. 세계가 인정한 우리의 우수한 무형 자산을 보존, 전승하는 것은 우리의 책무다.

無等鼓

슬픈 들녘



한가위는 1년 중 가장 풍요로운 때다. 햇곡식과 햇과일이 나와 만물이 풍성하고, 드높은 하늘과 너른 들녘은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 곡식이 혀를 빼물고 자라게 하며 대자연을 살찌우는 갈바람이 부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절이다. '더도 덜도 말고 늘 가윗날만 같아라'는 말도 예서 나왔을 게다.

'5월 농부, 8월 신선'이라 했듯이 농업을 천하의 근본(農者天下之大本)으로 삼았던 조상들의 5월은 바쁜 농사일에 흘러내리는 땀으로 등거리가 마를 날 없었지만, 8월이 되면 튼실하게 영글어가는 들판을 바라보며 한숨 돌릴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

같은 추수기 명절이지만 으뜸 작물이 무엇이냐에 따라 무게가 달라지기도 했다. 북한지역에선 보리 농사를 많이 지어 보리 수확기인 단오를 가장 큰 명절로 삼았지만, 쌀농사가 주종이었던 남한에선 쌀을 거두는 한가위가 대명절이었다. 특히 한가위는 곡창(穀倉)인 호남의 대표 명절이었다가 전국으로 확대됐다는 설도 있다.

민속적 측면에서 한가위는 가을 곡식을 거둔 뒤 감사예배를 올리는 서양의 추수감사절과 달리 추수기원제 성격이 강했다. 수확 전에 조상의 덕을 먼저 기리는 추원보본(追遠報本)의 의미가 담긴 것이다. 그 해 난 올벼를 조상에게 천신(薦新)하는 '올벼신미'나 '풋바심'도 연원은 비슷하다. 가정에서는 햅쌀을 성주단지에 새로 채워 넣으며 수확에 감사하기도 했다.

올해도 연이은 풍작 속에 중추가절(仲秋佳節)을 맞았지만 들녘엔 풍년가 대신 한숨과 시름만 그득하다. 쌀값 폭락으로 또다시 쌀 대란이 우려되는 탓이다. 이미 2008년산 쌀 가격은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10% 가까이 하락했다. 일부 농민들은 대북 지원 재개와 수확량 전량 수매 등을 요구하며, 자식처럼 애지중지 키워온 벼를 갈아엎고 있다. 수확기 농민들이 '8월 신선'은 아니더라도 황금빛 들판을 바라보며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날은 언제쯤일까.

/정후식 사회1부장 who@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안내 〈대표FAX 222-4918〉 편 집 부 2200-672 정 치 부 2200-634 경 제 부 2200-641 사 회 1 부 2200-612 〈F A X 222-4267〉
사 회 2 부 2200-692 〈F A X 227-0118〉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79 체 육 팀 2200-663 사 진 부 2200-691 조 사 부 2200-571
경 영 지 원 국 2200-511 〈F A X 222-8005〉 광고마케팅국 2200-521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문 화 홍 보 국 2200-541 〈F A X 222-0195〉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서 울 지 사 02-773-9331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4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